

# 감염재생산 지수를 고려한 코로나19 대응의 경제학적 논의와 시사점

김 남 중 (연구위원, 3705-6266)

## 〈요 약〉

-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감염병 전파의 동학(dynamics)을 비롯한 관련 정보가 공유되면서 경제학자들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있음.
- 이들 모형은 코로나19 전파 프로세스를 기존 경제학 분석 틀에 수용하여 코로나19 통제를 제약 조건으로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을 극대화하는 균형을 도출함으로써 경제활동의 편익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비용 간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분석할 수 있게 함.
- 특히 감염재생산 지수( $R$ )는 감염병 경제의 상태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상태변수(state variable)로서 ' $R \leq 1$ ' 조건은 기존 사회·경제적 목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하며, 경제활동의 유형별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준거를 제공함.
- ' $R \leq 1$ ' 제약 하에서의 사회적 후생 극대화를 위해서는 감염확산 위험 대비 경제적 편익의 비율이 좋지 않은 유형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거나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활성화 등 효과가 큰 비약학적 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들을 적극 활용해야 함.
- 또한 현재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 대응 체계에 감염재생산 지수의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계속해서 동 지수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최근 미국의 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19만명대로 나타나고 있고, 유럽의 경우도 10월 중 일일 확진자수 20만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20만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겨울철을 맞아 세계적 대유행이 진행 중이다.<sup>1)</sup>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1,000명대를 돌파하면서 3차 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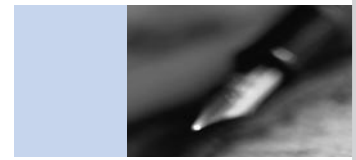
이렇듯 발생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글로벌 감염 상황이 장기화되고, 바이러스의 자연 종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경제냐 방역이냐’와 같은 극단적 논의보다는 감염병 확산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감염병 이전의 사회적 활동 유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각계의 담론이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경제학계에서도 코로나19의 역학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축적되면서 감염병 통제를 기존 경제이론의 틀 속에 포함시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경제학계 논의를 간략히 소개하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방임(Laissez-faire)과 봉쇄(lockdown)의 비현실성

발생 초기부터 나타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역학적 특징을 보고 각국 정책당국이 방임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일단 초기 감염재생산 지수(Basic Reproduction Number:  $R_0$ <sup>2)</sup>)의 추정치를 감안할 때 바이러스의 자연 소멸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실제로 확진자 증가 속도도 당초 예상보다 빨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른바 집단 면역(herd immunity) 형성에 의한 해결을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았고,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많은 사망자 발생과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임페리얼대학(Imperial College)의 한 보고서는 미국의 코로나19 발생 1년

1) 12월 7일 시점에서 지난 일주일 간 미국의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약 19만 2천명이며(CDC 집계), 유럽은 약 20만 6천명에 달한다(WHO 집계).

2)  $R_0$ 은 감염병 발생 초기 아무런 관련 정보와 대응조치가 없고, 사회 내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감염대상인 상황에서의 감염재생산 지수( $R$ )에 해당한다.



이내 예상 사망자 숫자를 2백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기도 하였다.<sup>3)</sup> 물론 이 예상치는 정부 차원의 통제 조치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도 없는 완전한 무대응의 가정 하에서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숫자로 볼 수는 없지만, 방임 정책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여타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보다 현실적인 가정 하에서도 방임 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여전히 과중한 수준으로 나타난다.<sup>4)</sup>

락다운, 즉 봉쇄 조치의 경우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수반된다는 사실이 지난 3월 이후 주요국들의 경험을 통해 명확해졌다. 미국의 경우 2분기 중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무려 4천5백만 건에 달하는 등 실업이 급증하였으며, 전분기 대비 약 31%(연율환산)의 GDP 감소를 경험하였다.<sup>5)</sup> 유럽의 경우에도 2분기 중 GDP가 전분기 대비 약 11%(분기변화율) 감소하는 등<sup>6)</sup> 락다운을 실행했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극심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경제활동 중지가 야기하는 손실 및 경제활동 재개에 따르는 비용<sup>7)</sup>을 생각할 때, 락다운은 한 번 실행으로 바이러스의 완전한 퇴치(eradicate)가 가능한 경우에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지만,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락다운과 재개(reopening)를 반복하는 것이 최적의 대응이 아님은 확실하다.

방임과 락다운이 모두 비효율적인 양 극단의 선택지이기 때문에 감염병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면서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필연적인데, 이는 곧 경제활동의 편익과 감염병 위험 간 트레이드오프

3) Ferguson et al.(2020), 'Report 9: Impact of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NPIs) to reduce COVID-19 mortality and healthcare demand,' Imperial College COVID-19 Response Team, 2020.3.16. 참조

4) 일레로 Farboodi, Jarosch, and Shimer(2020)의 연구('Internal and External Effects of Social Distancing in a Pandemic', Working Paper, Becker Friedman Institute)에서는 모형 분석을 통해 방임 균형('laissez-faire equilibrium') 하에서의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을 1년치 GDP의 28%로 추정하는데, 이 또한 공공의료서비스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채널을 감안하지 않고 도출한 결과이다.

5)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GDP 감소 관련 통계는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Unemployment Insurance Weekly Claims Data'와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GDP 자료를 각각 참조하였다. 그 외에도 Beland et al.(2020)의 연구('COVID-19, Stay-at-Home Orders and Employment: Evidence from CPS Data', Discussion Paper Series, IZA Institute of Labor Economics)에 따르면 미국의 자택대기령(stay-at-home orders)은 실업률을 4%p 상승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6) Eurostat 참조

7) 예를 들어 Princeton 대학의 Markus Brunnermeire 교수는 락다운 후 경제재개 시 비대면 영업활동에 필요한 고정비용이 들 수 있으며, 소상공업자들의 경우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고 영업활동을 재개한 후 재차 락다운이 실행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tradeoff)를 고려하여 감염병 통제의 적정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유지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 감염재생산 지수 및 $R \leq 1$ 조건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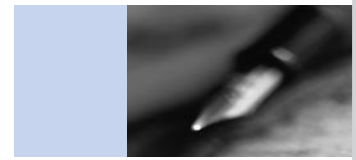
감염병학(epidemiology)에서 감염병 전파 예측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모형들은 주로 이른바 ‘SIR’ 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SIR 모형은 사회 내 전체 인구를 감염대상군(Susceptible), 감염군(Infected), 회복군(Removed)으로 분류하고, 감염병 발생 후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모형으로 초기 감염자들이 감염대상군과 접촉하여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이들 감염군이 다시 일정 비율로 회복되거나 사망하면서 감염대상군→감염군→회복군의 순서로 집단 간 이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모형의 이러한 구조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정 시간의 경과 후 사회 내 누적 감염자수 및 사망자수의 예상치를 구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물론 감염병 대응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이다.

SIR 모형의 핵심 가정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감염군의 증가율이 감염군 규모에 비례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감염군은 시간의 지수함수적 증가(exponential growth)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감염군의 감염재생산 지수(Reproduction Number: R)는 기존 감염환자 한 명이 평균적으로 감염시키는 사람의 數로서 지수함수적 증가 속도의 결정인자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정 시간 경과 후 누적 감염자수 및 사망자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이 모형의 모수(parameters) 값과 초기감염자수( $I_0$ )를 변화시키면서 1년 후의 누적 감염자수를 구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초기 감염재생산 지수( $R_0$ )의 영향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sup>8)9)</sup>

즉, 감염재생산 지수는 향후 사회 내 감염병 전파의 양태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기저 변인이기 때문에 기존 경제학 모형에 감염병 통제를 결합한 분석을 시도하는 경제학자들이 동 지수를 감염병

8) SIR 모형에서  $R_0$ 은 감염자 1인의 일별 평균 접촉자수( $\beta$ )와 평균적인 감염상태 지속 일수( $\gamma$ )의 비율( $\beta/\gamma$ )로 표현되는데,  $\gamma$ 를 임상 추정치로 고정시키면  $\beta$ 를 변화시키는 것과  $R_0$ 을 변화시키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된다.

9) 전술한 바와 같이 여기서 누적 감염자수는 사회 구성원들의 위험 자각에 의한 대응이나 정부의 개입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구한 모형 상의 가상 숫자이다.



경제의 상태변수(state variable)로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다. 코로나19의 심각성이 고조되면서 이러한 맥락의 경제학적 분석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시카고 대학의 Eric Budish 교수의 이론<sup>10)</sup>을 중심으로 감염병 경제 하에서의 감염재생산 지수의 함의를 정리해본다. 유사한 맥락의 여타 이론들<sup>11)</sup>이 대체로 대규모 락다운 및 경제재개 여부와 같은 특수한 상황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복잡한 동태적 모형을 가정하고 감염재생산 지수를 분석에 포함시키는데 반해, Budish 교수의 이론은 단순한 정태적 모형 하에서 감염재생산 지수의 경제적 함의를 직관적으로 잘 설명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경제학 모형들은 대부분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효용(후생)을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제약 하에서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론을 전개하는데, Budish 교수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러한 목적함수-제약조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제약조건에 단순히  $R \leq 1$  조건 하나만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Budish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R \leq 1$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감염병 통제와 기존의 사회·경제적 후생 극대화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에 근접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는데,  $R \leq 1$ 이 적절한 제약 조건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SIR 모형 상에서  $R=1$ 은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느냐 점차 소멸하느냐를 나누는 임계점에 해당한다.  $R > 1$ 의 상태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면 집단면역 달성 전까지 감염자가 늘어나고,  $R < 1$ 의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소멸하는 경로가 된다. 또한  $R=1$ 을 중심으로 감염재생산 지수가 보다 높을 때와 낮을 때의 사회적 비용의 변화가 대칭적이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감염자 수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에 기인하는데, 일단 감염재생산 지수가 1을 상회하게 되면 해당 지수값이 조금만 높아져도 누적 감염자의 증가폭이 현격히 확대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급증한다. 예를 들어 Budish 교수는 논문에서 미국의 초기 감염재생산 지수가 1에서 1.5 수준

10) Budish(2020), 'Maximize Utility subject to  $R_t$ : A Simple Price-Theory Approach to Covid-19 Lockdown and Reopening Policy', NBER Working Paper Se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1) Farboodi, Jarosch, and Shimer(2020), Acemoglu et al.(2020), 'Optimal Targeted Lockdowns in a Multi-Group SIR Model', NBER Working Paper Se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ssenza et al.(2020), 'The Hammer and the Dance: Equilibrium and Optimal Policy during a Pandemic Crisis', Macroeconomic Group, Toulouse School of Economics 등의 연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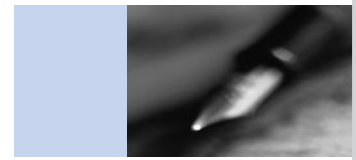


으로만 높아져도 1년 후 누적 감염자수가 1억명 가까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실제로는 사람들의 경계심 강화와 행태 변화 등으로 인한 자체적인 억제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R > 1$ 의 영역에서는 감염재생산 지수가 소수점 단위로 조금만 높아져도 누적 확진자 수의 증가폭은 폭발적일 수 있고, 이 경우 신속하게 감염재생산 지수를 낮추지 않으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감염재생산 지수가  $R > 1$ 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통제조치들을 즉각적으로 강화하여 지수를 낮추기 위한 대응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저명한 금융경제학자인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의 John H. Cochrane 교수는 실제 감염자 수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신규 확진자 수나 확진률보다 감염재생산 지수에 정책을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12)</sup> 반면 감염재생산 지수가 1을 하회하는 영역으로 진입하면서부터는 해당 지수값을 더 낮춤으로써 줄일 수 있는 감염자 수가 작아져서 추가적인 공중보건상의 이득도  $R > 1$ 의 영역에서보다 훨씬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비선형성(non-linearity)의 특징 때문에 코로나19의 감염재생산 지수를 백신 보급에 의해 바이러스가 소멸될 때까지 1보다 낮지만 1에 비교적 근접한 범위에 있도록 지속적으로 통제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영위하는 대응 방식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경제활동 유형별 편익과 감염위험 간 트레이드오프와 비약학조치의 가치

$R \leq 1$  제약 하에서의 사회적 후생 극대화 문제의 해답은 단순히 감염위험을 높이는 유형의 경제활동을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방식은 경제활동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최적의 대응이 될 수 없다.  $R \leq 1$  제약은 그보다는 각종 경제활동의 위험 대비 편익을 평가하는 준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마치 예산제약 하에서 소비에 따른 한계효용과 비용이 각기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최적 조합을 찾아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때 각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대비 한계효용을 고려하는 것처럼, 사회 전체적인  $R \leq 1$ 의 제약 속에서 각종 경제활동(economic activity)이 가져다 주

12) John H. Cochrane 교수의 11월 11일자와 14일자 블로그 포스트 참조



는 편익과 해당 경제활동이 감염재생산 위험에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제 활동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Budish 교수는 이 경우 사회적 차원의 최적 의사결정은 감염재생산 지수를 상승시키는 위험 대비 효용의 비율이 높은 경제활동 순서대로  $R \leq 1$  제약을 소진시킬 때까지 한도를 채워나가는 것임을 보여준다.<sup>13)</sup> 즉, 감염재생산 위험 대비 경제적 효용의 트레이드오프가 좋지 않은 유형의 활동(예: 실내에서의 대규모 친목 모임)을 억제하는 것은 단순한 코로나19 확산 억제의 의미뿐 아니라 그보다 더 트레이드오프가 좋은 다른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제약을 완화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비약학적 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들은 개별 경제활동의 감염재생산 위험을 낮춤으로써 해당 활동의 위험 대비 편익의 비율을 개선시키고,  $R \leq 1$  제약 속에서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크다. 선택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기존에 위험 대비 편익 비율이 좋지 않아 억제해야 했던 활동의 비율이 개선되면서 가능한 선택지가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sup>14)</sup> 기존에 이미 가능했던 활동의 위험이 더욱 낮아지면서 가능하지 않았던 다른 활동들이 선택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특히 마스크의 경우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알려진 효과는 절대적이라고 할 만하다. Abaluck et al.(2020)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는 관습이 있었던 국가들(한국, 일본, 홍콩, 대만)과 그러한 관습이 없었던 나머지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를 비교하여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40% 이상 떨어뜨릴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Howard et al.(2020)은 코로나19의 초기 감염재생산 지수( $R_0$ )가 2.4~3.9의 범위에 있다고 가정할 때, 광범위한 마스크 착용과 여타 사회적 코로나19 통제 조치들을 통해  $R$ 을 1보다 낮은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 문헌들을 정리하였다.<sup>15)</sup> 마스크 외에도 경제적 효용 감소 영향은 작으면서 감염 위험 축소 효과는 큰('little harm to utility, large reduction in  $R$ ') 유형의 조치들은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3)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결론을 위해서는 몇 가지 모형상의 가정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14) 실내에서의 중요한 회의나 시험 등이 마스크나 여타 통제조치를 통해 가능해지는 경우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15) Abaluck et al.(2020), 'The Case for Universal Cloth Mask Adoption & Policies to Increase Supply of Medical Masks for Health Workers', Working Paper,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SSRN), Howard et al.(2020), 'An Evidence Review of Face Masks against COVID-19', Working Paper(<https://www.preprints.org/manuscript/202004.0203/v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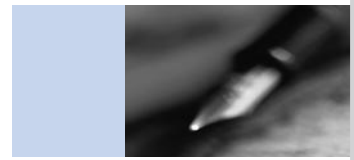


예를 들어 업종의 속성 상 비대면 전환에 따른 업무의 질적 하락이 크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들의 경우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것이 자체적인 위험 관리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감염위험 단위 당 경제적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의미가 있다.

## 시사점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대응은 당연히 일차적으로는 일선에서 지휘하는 방역 당국과 감염병 학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몫이다. 본고에서 정리한 경제학적 이론 또한 감염병의 역학 자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염병학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전파 및 억제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기반으로 경제와 방역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감염병 확산 억제에 관한 기술적 분석은 감염병 학자들의 역할이지만, 이를 고려한 여타 정책 목표와의 관계 속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정책 당국을 비롯한 사회 전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냐 방역이냐'의 자칫 호도되기 쉬운 프레임에 의해 경제적 고려가 적극적 방역의 걸림돌이 되기 쉬운 현 위기 상황에서 본고가 정리한 경제이론은 충분한 시사점이 있다. 감염재생산 지수를 1보다 낮게 억제하려는 것은 감염병학에서는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동 내용이 단순히 코로나19 확산을 무조건적으로 억제하려는 역학적 목표만을 고려한 결론이 아니라 경제적 편익과 사회 후생의 극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경우에도 최적에 가까운 조건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락다운 종료 후에도 경제적 이유를 내세워 방역에 느슨해졌다가 확진자의 급증으로 다시 락다운이 필요해질 만큼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생각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적인 방역체계와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코로나19 통제의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대응과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등도 큰 틀에서 본고의 시사점과 잘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의 논지와 연관지어 조심스럽게 몇 가지 제언을 첨부하자면, 신규 확진자 수와 확진률 외에도 방역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감염재생산



지수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sup>16)</sup>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에 있어 동 지수의 활용도를 높이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체계 하에서도 물론 감염재생산 지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sup>17)</sup>  $R > 1$ 의 영역에서는 동 지수의 상승을 조금만 방치해도 심각한 사회,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빠른 상향 조치처럼 감염재생산 지수가 1을 초과하여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감염 확산세를 억제하여 통제 가능한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술했던 것처럼 대면 접촉이 필수적이지 않은 사무직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회의를 권장하고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등 비약학적 통제조치를 확대하여 불필요한 감염위험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백신의 성공 소식으로 내년 중에는 코로나 19의 종료가 마침내 현실화될 전망이다. 마지막까지 지금의 성공적인 경제와 방역의 조화가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KIF**

16) 그간 방역당국은 감염재생산 지수  $R_t$ 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최근(11월 30일) 들어 매주 정례브리핑을 통해 동 지수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R_t$ 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7)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단계 상향 결정에 있어  $R$ 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5단계와 3단계 상향의 지표 중 하나인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또한 일정 부분 감염재생산 속도에 관한 정보로 볼 수 있다.